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1년 4월 1차



주요 현안



한시적 양육비 회수 실행력 제고와 양육비 소송 간소화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과 함께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6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 논의함.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총 6,680건, 839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해 양육비 이행률이 21.2%에서 36.1%로 증가
-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도입 등 비양육부·모의 책임성 강화
- 한시적양육비 지원액에 대한 국세 강제징수 준용 관련 실행계획,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양육비 관련 소송 간소화 방안 논의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3.28.]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68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총괄 점검 기능 강화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 신설·운영

- 해당 과에선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총괄·점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 연구와 인식개선 홍보 추진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3.3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68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밝힘.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및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관리 제고와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관리 방안과 어린이집 내 감염병 의심 영유아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규정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집 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사유에 반영하여 보육서비스 질 개선 도모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03.30.]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 국회 권인숙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주관하는 세미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가 개최됨.

- 이번 세미나는 지난 23일 공포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
- 2021년 3월 23일 공포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3.3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90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원 강화 도모

☑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함.

- 불법촬영 탐지기술 개발·보급, 범죄통계 분석과 지리적 범죄분석(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별 대응
-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지침' 보완, '스토킹전담조사관' 지정·배치
-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 마련 등 공공부문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등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0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97

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거짓·과장 광고 처벌대상 확대

☑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 조사를 실시함.

- 여성가족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받도록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무등록업체의 온라인상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0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_Sn=707698

포용적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 모색

☑ 여성가족부는 '포용적 가족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간담회에는 한국한부모연합 등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현행 제도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0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_Sn=707707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0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06.]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_Sn=707710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돌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2021-04-09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정하고,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여성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4인)	2021-03-29	여성 근로자가 경제활동 및 생산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를 2명 이상으로 하고, 이 중 반드시 1명은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할 필요가 있어 근로자대표의 정의, 활동 및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노사간 원활한 협력 도모(안 제2조, 제14조의2 및 제110조)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2021-03-26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주거·고용 지원예산을 제외한 임신·출산·양육 비용 지원 예산에 대한 통계를 산출·관리하도록 하여 정책효과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경우와 합리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후단).
젠더 폭력· 안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2021-03-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등 직원의 업무량 및 근로조건 등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46조의3 및 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	2021-03-30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큰 피해 방지(안 제52조제3항 후단 신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2021-04-01	음주 또는 흡연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영상물의 도입 부 또는 해당 장면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강화(안 제28조의2 신설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2021-04-02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고소사실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정보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예방(안 제24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2021-04-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및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35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2021-04-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가정폭력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및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18조의3)

법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1-04-01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서 다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안 제17조제3항 신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21-04-0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 지원,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등의 사업 추진에 적합하도록 기관명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조항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명확화(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제46조제5항)
교육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3인)	2021-03-26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또는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의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2021-03-29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유치원교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를 추가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3.26	동아일보	20대 여성 약 3명 중 1명, 코로나로 퇴직 경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27/106107098/1
청년 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4.4	이데일리	썬캣-맨얼굴 면접자에... "페미니스트세요?" 논란 확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1926629013496&mediaCodeNo=257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3.31	오마이뉴스	한국에는 더 많은 사유리가 필요하다	김은지 연구위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983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사건의 판결과정에서 기본적인 형사소송의 절차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하여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고, 판단자의 성인지 감수성이나 젠더 편향성이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지 살펴봄.

참고자료

- [KIC ISSUE Paper 2021 Vol.1, 2021.03.31.]
https://admin.kic.re.kr/upload/pubdata/ebook/issue_2021_01/index.html